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46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. 13.

발 의 자 : 권명호 · 김석기 · 김용판
김희국 · 백종헌 · 이주환
임이자 · 정경희 · 정우택
지성호 · 한무경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보조금 관리법」 또는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근거하여 환수 처분을 하고 있음.

그러나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협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완수하지 못하여 실패한 경우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을 위반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나, 「보조금 관리법」 또는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.

이에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환수처분 규정을 이 법에 신설하

여 명확한 근거를 둬으로써 법 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2조의2 신설).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3조의2(지원금의 환수)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사업 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)에 참여한 예비창업자, 기업, 학교, 기관,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-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과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63조의2(지원금의 환수) ①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사업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)에 참여한 예비창업자, 기업, 학교, 기관,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 기준과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</u></p>

정한다.